

 <b>보건복지부</b>		<h1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2월 26일(화) 건강심 종료 후</p>		
배 포 일	2019. 2. 26. / (총 6매)		담당부서	예비급여과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
응급실·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	과 장	손 영 래	예비 급여과	044-202-2670
	담당자	김 정 숙		044-202-2661
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	과 장	곽 순 현	의료자원 정책과	044-202-2450
	담당자	권 용 진		044-202-2451
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	과 장	정 윤 순	보건의료 정책과	044-202-2420
	담당자	이 유 리		044-202-2404

## <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> 응급실·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

- 보건복지부,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(2.26) -

- ▣ 응급실·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고, 인력확충, 환자·의료인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
- ▣ 작년 7월 발표된 ‘의료기기 규제혁신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선(先) 진입 - 후(後) 평가 방식으로 전환
- ▣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“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계획” 추진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월 26일(화)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(이하 '건강심', 위원장 : 권덕철 차관)를 열어, △응급실·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, △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, △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.

□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< 응급실·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>

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(17.8월)의 후속조치로, 응급실·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,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.

○ 이 계획은 응급실·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·치료재료(소모품)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,

-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.

○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·치료재료(소모품) 등 260여개\*로,

\* 후두마스크,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, 심음·폐음·체온 감시, 응급초음파, 배액관고정용판 등

-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,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,

-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·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.

-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- 또한, 응급실·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.
  -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,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,
  -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,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·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, 필수 처치,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.
  - 특히,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·의료인 안전, 의료 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
  - 응급·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·처치 등 수가 개선, 의료 인력 투입에 대한 적절한 수가를 보상하고,
  -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, 감염 예방·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.
- 이번 응급실·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,
  -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## <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>

-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.
  - 현재,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, 신의료기술평가, 건강보험 급여등재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~420일 가량이 소요된다.
  -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'기본적 안전성'부터 '확립된 효과성'까지 폭넓게 검토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, 체외진단검사\*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.
    - \* 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(혈액, 분변 등)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검사
  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,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'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'에서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.
    -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,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(NECA)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.
    - 다만,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(약 319개 기관)으로 제한되며, 분기별로 사용량, 실시 의사,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(NECA)에 제출해야 한다.

-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,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,
  - 3월에 '감염병 체외진단검사'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,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.
  - 아울러,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할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.

### <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>

-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“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”을 수립하고,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  -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,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\*이 확충되었다.
    - \* (예) 평가대상(종합병원 이상) 중 의료기관 인증기관 : ('15) 161개소 → ('18) 216개소, 환자안전 전담인력 도입 기관 : ('15) 203개소 → ('18) 317개소
  - 하지만, 평가제도에서 시설·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,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·적용하고, 보상구조를 개편하여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.

-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.
  - 2020년에는 ‘마취’, ‘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’ 지표 등을 신설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,
  -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(패널)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,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,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  - \* 전년 대비 “향상 수준”을 평가점수 산출 시 반영하거나, 점수 향상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 등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 검토
- 아울러,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·상담(컨설팅)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.